

# 박근혜, 18개 혐의 중 16개 유죄

### 774억원 재단 출연금 강요·K스포츠 추가 출연·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정유라 승마지원 일부 유죄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운)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 강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 등 모두 18가지 혐의를 받고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져 354일만의 선고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8가지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며 "그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66) 등과 함께 롯데·SK 등 대기업을 상대로 총 774억원의 재단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했다고 봤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에 한국동계스포츠진흥센터 후원을 강요하고, 롯데·SK에 K스포츠 재단 추가 출연을 요구한 혐의 등도 유죄를 인정했다.

삼성이 정유라(22)에 대한 승마지원 혐의와 관련해서는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차량 4대의 소유권을 최서원이 뇌물로 받았다는 부분은 무죄로 판단한다"면서 "무상으로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뇌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현대차 KD코퍼레이션 납품계약과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발주에 압박을 넣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되는 협박에



지난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전자상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이 TV를 통해 생중계 되고 있다. 이날 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들어간다고 판단했다. 다만 플레이그라운드에 70억원 상당의 광고를 발주 한 혐의는 강요죄만 적용됐다.

포스코그룹에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강요하고 펜싱팀 운영권을 더블투게이에 넘기도록 한 혐의는 직권남용·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최순실, 안중범과 공모해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투게이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도록 그랜드코리아레저에 강요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KT광고대행사 선정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을 제외한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플

레이그라운드가 최순실 소유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직무상 연관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 및 단체를 정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지시하고, 이에 협조하지 않던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들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했다.

또 노태강(58) 당시 문체부 국장(현 제2차관)에게 정세와 관련해 대한승마협회를 조사하게 한 뒤 '나쁜 사람'으로 찍어 사직을 강요하고, 정권과 맞지 않는 콘텐츠를 제작한다는 이유로 이미경(60) CJ 부회

장의 퇴진을 요구한 혐의 등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비록 피고인이 구체적인 행위마다 인식하지 않았다 해도 국정 최고 책임자인 만큼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최씨의 추천으로 KEB하나은행에 이상화 전 독일지점장을 본부장으 임명하게 하고, 정호성(49) 전 비서관을 통해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전달하도록 한 혐의 등도 일부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가 무죄로 인정한 혐의는 삼성 영재센터 후원과 삼성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혐의다. /이상민 기자

## 도의회 농산경제위 위원장 강용구 의원 선출

제10대 전라북도의회 하반기 농산경제위원회 위원장에 강용구 의원(남원2)이 선출됐다.

6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3일 제352회 임시회를 열고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농산경제위원회 위원장에 강용구 의원을 선출했다.

이와 함께 농산경제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강성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을 선임했다.

강용구 위원장은 "전북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농산경제위원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그동안 성실하고 묵묵히 다져온 정치적 노하우를 통해 남은 임기 동안 도민의 대변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강용구 의원

## 위안부합의검토 TF위원장 오태규

### 駐오사카 총영사 임명

오태규 전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위원장(사진)이 지난 6일 신임 주(駐)오사카 총영사에 임명됐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오 신임 총영사는 한겨레신문 도쿄 특파원과 논설실장 등을 거친 '지일파(知日派)'로 현 정부 출범 후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특히 지난해 7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과정 전반을 되짚어보기 위한 외교부 장관 직속 TF 위원장을 맡아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재검토를 주도하는 역할을 했다. /뉴시스



## 민주당, 6·13 지방선거 경선서 노무현·문재인 명칭 허용키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오후 6·13 지방선거에서 경선 후보의 대표 경력에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등 문재인·노무현 대통령의 이름을 넣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당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명칭 사용 불허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약 1시간 가량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당이 밝힌 기준에 따르면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 근무한 경력은 다 기재할 수 있으며, 정부 부처에서 일한 경우에는 장·차관 경력만 사용할 수 있다.

최고위는 이같은 내용을 의결하고 당 선관위에 재심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최고위에서 논의된 안을 재심한다. /뉴시스

#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마쳐

### 세입결산액 3조3103억원 · 세출결산액 2조9961억원 · 세계잉여금 3142억원

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해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를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실시했다.

6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결산서 확인 및 재정집행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회계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게 된다.

결산검사위원은 도의원 3명(허남주, 정호윤, 최영규), 세무사 2명, 전직공무원 5명 등 총 10명이다.

결산검사는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을 확인했다.

도교육청의 2017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3조 3,103억 원, 세출결산액은 2조 9,961억 원이며, 세계잉여금 3,142억 원이다.

세계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2,080억 원, 보조금잔액 2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1,060억 원이나 이중 610억 원은 이미 본예산에 편성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허남주 의원은 "이번 결산검사는, 전라북도교육청이 법령에 따라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였는지에 중점을 두고 검사를 실시했다"며, 검사결과 "결산서 및 첨부서류가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외국어교육원 등을 조성하고, 은닉재산 발굴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등 모범적인 사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미수채권의 확보방안 강구, 일부 사업에 대한 과다한 비용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다"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번 결산검사를 통하여 개선하도록 도교육청에 권고했다"고 전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도 "이번 결산검사 결과 제시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교육재정 운영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진성 기자

## 靑 "남북 정상회담 경비, 정부 예산 예비비 사용"

청와대는 2018 남북 정상회담 추진 비용은 올해 정부 예산의 예비비에서 사용할 계획이라고 지난 6일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 정상회담 비용 분담 주체가 어디인가'라는 질문에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소요되는 경비는 정부의 일반예산 예비비를 사용할 계획"이라며 "현재 예비비 사용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2000년 제1차 남북 정상회담과 2007년 제2차 정상회담 때도 추진비용은 모두 정부 예산의 예비비에서 집행한 바 있다. 이번에도 같은 절차를 밟겠다는 게 청와대의 구상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관문점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 "평화의 집이 많이 낡아서 리모델링 할 것은 하고, 가구도 재배치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호 관련 시설도 이번엔 보강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점검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전날 있었던 경호·의전·경호를 위한 실무회담에서 북측이 요구한 것을 리모델링에 반영되는지 여부에 대해선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뉴시스



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 전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

